

與 “미래 재정 부담” 野 “노후 소득 보장” 연금안 입장차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공론조사 결과 놓고 대립

여야는 지난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을 두고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왜 소득대체율 50% 안은 소득보장안이고,

소득대체율 40%는 재정안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라며 “재정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느낌이고, 소득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 있어서 네이밍이 한쪽에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 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설문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 이를 논의로 하니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속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 공된 자료를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론화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료율은 9%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국힘 원내대책회의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민주당과는 협력·경쟁 관계”

조국혁신당 당직자 조회...“민주 위성정당 아냐” 독자노선 강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30일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 당직자 대상 조회 인사말에서 “조국혁신당은 창당도 선거도 민주당 도움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진보와 개혁 과제를 위해 민주당과 ‘확고한 협력 관계’이자 ‘생산적 경쟁 관계’임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회 원내 교섭단체 기준 하향 조정이나 조국혁신당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별검사법’ 발의에 민주당이 협력할지를 두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의식하면서 조국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회에는 황은하 원내대표와 황현선 사무

총장, 차규근 대표비서실장, 조용우 정무실장, 김보현·배수진·강미정 대변인 등 최근 인선된 당직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조 대표는 이들에게 “이전 당직이 어디였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당의 비전, 가치, 행동양식을 체득해 달라”며 “창당도 선거도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국민만 믿고 진행했음을 명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존의 정치공학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직자 중 좋은 정치인이 배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각국의 표를 얻기 위해 재외공관 신설을 미끼로 던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尹, 언론 장악 생각 없고 관여 안한다 말해”

국힘 원내대표 경선

3일→9일 일정 변경

진성준 민주 정책위의장 라디오 출연...영수회담 내용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에서 ‘언론을 장악하거나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난 30일 알려졌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은 ‘언론을 쥐려면 그 방법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관여한 바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에 배석했다. 그는 이 대표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방송심의 문제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며 “대통령이 ‘난 잘 몰랐다’,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 하는 일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

에 대해 중징계가 이어지고, 보도를 이유로 기자·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 국민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비공개 회담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내린 징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소개하면서 “(회담에서 배석한) 홍보수석의 ‘아직 불안소송이 남았다’는 얘기도 했으니 (대통령이) 인지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과 관련해서 “50만 원씩 드려서 (민주당 제안을) 되치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이 3일에서 9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변경 사유에 대해선 “지난 29일 당선자 총회에서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초선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선관위에 같은 요청이 다수 있어 선관위가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공고를 다시 한 뒤 5일 후보 등록을 받고, 닷새간 선거운동을 거쳐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방정가 라운지

“서구청 업무 소홀로 장애인 87명 지원금 누락”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 자치단체의 업무 소홀로 87명의 장애인 생활 지원금 누락자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 장애인 생활 지원금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월 2만원씩 지급되며 전액 광주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 의원(민중·동구2)은 지난 30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 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7446만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이 지나 2124만원은 완전히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의 지원금을 구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지원금이 5년간 대상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장애인 생활 지원금 지원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2021년 4월 5개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지만 조사 이후에도 관련 담당자들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 광주시에서도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금 교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실태 점검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